

【서평】

김정은의 ‘북한호’는 어디로?

* 임을출 엮음, 『한반도 전문가 30인에게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 파주: 한울, 2012.

* 서보혁·김일한·이지순 엮음,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 서울: 선인, 2014.

이무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 들어가며

최근 북한의 행보가 또다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은 2015년 5월 9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사진을 관영매체들을 통해 공개했다.¹⁾ 북한의 SLBM 시험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성공 유무를 비롯해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에 의한 ‘핵 공포’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가운데 13일에는 국정원이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사실을 밝힘으로써 김정은의 ‘공포

1) “북한 ‘전략잠수함 탄도탄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연합뉴스』, 2015년 5월 9일.

정치가 북한의 핵문제와 함께 국내외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²⁾ 현영철 숙청과 관련해 국정원이 밝힌 첩보 수준의 처형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2012년 리영호 숙청, 2013년 장성택 숙청과 연결되어 국내외 여론은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폭압적 성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호전성과 비정상적 행태에 대한 비판은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한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로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도 국내외의 학계 및 언론계에서는 김정일 정권의 불안정성과 북한 붕괴론이 주로 논의됐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럭저럭 버티기’ 방식으로 현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붕괴론은 수그러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붕괴론이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망각한 채 북한의 두 번째 권력교체에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북한 붕괴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현실 분석에 투영되어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를 왜곡하고, 미래의 전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북한 체제의 특성상 수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의 죽음이 곧 체제 및 정권의 위기로 연결될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³⁾ 그러나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 등의 사례를 교훈 삼아 사전에

2) 국정원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불경·불충죄’로 숙청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영철이 4월 30일 평양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수백 명의 고위군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포로 총살됐다는 ‘첩보’도 입수했지만, 처형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이 밝힌 북 현영철 처형 전말 ... 불경·불충죄,” 『연합뉴스』, 2015.5.13. 그런데 북한이 아직까지 현영철 숙청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방영하는 기록영화에서도 현영철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숙청이 사실이 아니거나 해임되었더라도 공개처형 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3) 소련의 경우, 스탈린 사후 권력 투쟁과 스탈린 격하 운동이 일어났고, 중국의

수령의 후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령의 유고라는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 왔다. 이는 김정일 정권에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70년 간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북한 체제의 구조적 속성과 능력 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문제'에 접근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의 역사와 구조, 능력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 공포정치 등과 같은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는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북한 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한계 위에서 펼쳐지는 주요 행위자 및 주민들의 의식과 행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주목한 책이 3년 전 (사)경실련 통일협회가 한반도 전문가 30인과 펼친 좌담회 내용을 정리해 발간한 『한반도 전문가 30인에게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한울, 2012)와 지난해 현대북한연구회가 집단 연구의 성과로 발간한 연구총서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선인, 2014)이다. (사)경실련 통일협회가 발간한 책은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에게 공식적 권력승계 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한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한반도 전문가 30인이 당시 제기되고 있었던 북한 문제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반면에 현대북한연구회의 연구총서는 중견 및 소장학자들이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 3년을 분야별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체제의 지속과 변화를 논의한 논문집이다. 책의 성격이나 논의의 시점은 다르지만 다루고 있는 북한 체제 변화와 관련한 쟁점과 과제는 유사하다. 또한 북한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에서

경우에도 모택동 사후 권력 투쟁이 발생하였다. 대체로 권위주의 및 독재정권에서 독재자의 죽음은 체제 및 정권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동일하다.⁴⁾

이 두 권의 책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안고 있는 과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도 매우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불확실한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균형적 시각으로 북한 체제의 역사가 만들어낸 현 체제의 구조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의식과 행위 양상,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 작업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이 책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도전과 과제, 북한에 대한 인식과 연구방법, 그리고 김정은 체제 연구의 과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II.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도전과 과제

『한반도 전문가 30인에게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는 2012년 당시 경제, 정치·군사, 북중관계, 북미관계, 남북관계, 새로운 대북정책의 구상 등 각 분야별 김정은 체제의 핵심 쟁점과 과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 식량문제, 빈부격차, 시장통제, 물가폭등(환율폭등), 경제의 중국 예속화, 지역 간 격차, 경제강국 건설, 개혁개방 전망과 관련한 쟁점을 짚어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과 정당성 유지를 결정할 최대 변수는 경제문제, 특히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핵심과제라

⁴⁾ 북한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책들이 다수 출간되고 있지만 분석적인 저서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분석적인 연구결과물은 주로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주요 (대학)연구소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가 대부분이다. 최근에 북한연구학회가 발행하고 있는 연구총서 시리즈(총 5권)도 주목할 만하다.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적 정착과 개혁개방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북한 경제 전문가의 의견이 개선되어 있다. 정치군사 분야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미래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안정, 중장기적으로 불안정 혹은 불투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북한 수령제의 특성과 당시와 김일성 사망 시기의 대내외적 조건과의 비교 속에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및 이데올로기 제시 가능성, 선군정치의 지속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그리고 북한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이 정치적·군사적 의존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북중관계를 비중 있게 다룬다. G2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해 전략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가 중국이라는 도전과 기회의 요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북미관계와 관련해서는 2012년 2월 북미 양국이 양의한 2.29 합의가 주목하면서 돌발변수가 없는 한 북미 간 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당시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돌발변수, 즉 북한의 미사일 발사(인공위성 발사) 시험과 제3차 핵실험으로 대화는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5.24 조치, 남북 정상간 합의 이행문제, 개성공단 등의 핵심 문제를 살펴보면서 남북관계는 어떤 조건에서 복원될 것이며, 복원 이후 어떤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

당시 쟁점들은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의 등장이라는 권력교체기라는 점에서 수령의 사망과 새로운 수령의 등장으로 인한 북한 체제의 안정성 여부, 새로운 수령으로서 김정은의 리더십, 김정은 정권의 과제 등이 주된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투영된 다소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당시 쟁점과 과

제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북한 체제의 변화 여부였다. 과연 북한 체제는 대내외적 도전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수령과 함께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불안정 속에 소위 말하는 급변사태 혹은 붕괴의 나라로 떨어질 것인가? 한반도 전문가 30인은 이와 관련해서 북한 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한계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30인의 전문가들이 논의한 북한 문제의 쟁점과 과제는 어떻게 진행되어 나갔고,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 『한반도 전문가 30인에게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 발간 후 2년이 지난 시점(2014년)에서 출간된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가 이에 답하고 있다. 이 책은 국가전략과 이념·권력구조를 분석한 논문 3편, 경제와 노동 분야의 논문 3편, 사회와 문화 분야 3편, 핵문제와 대외정책 분야 2편 등 총 11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먼저 서론에서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체제의 출범은 북한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몰고 왔다고 평가한다. 북한 내부의 권력교체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북관계, 북핵문제, 대외관계를 비롯해 장성택의 전격적인 숙청사건까지 북한 사회는 문자 그대로 다이내믹한 시기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은 체제의 공식적인 출범 이후 불과 2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지만, 그 변화의 내용과 깊이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 분야에서는 북한이 추진하는 국가전략과 이를 정당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권력구조를 분석·평가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전략(발전전략)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북한 경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장의 문제, 특히 인플레이션 문제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일 유형을 통해 분석·평가하고 있다. 사회·문화의 경우, 추모문학을 통해 문학이 어떻게 당국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는 데에 활용되고 있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음악정치'라는 개념을 통해 북한 당국의 정치적 의도와 함께 북한의 변화된 사회경제상을 북한 당국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년동맹 분석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청년 세대를 중시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핵문제와 대외정책의 경우, 북한의 대외정책과 핵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를 둘러싼 쟁점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현대북한연구회의 집단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국내 정치 부분에서 북한 체제를 안정시킨 것으로 평가한다. 더불어 경제적인 성과 역시 이전 정권과는 차별화된 정책과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권력구조와 시장 인플레이션의 지속, 식량부족, 공장가동률 저하에 따른 실업문제 등 김정은 정권이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권력 교체기에 제기됐던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여부는 2년이 지난 2014년 시점에서, 현대북한연구회의 중견·소장 연구자들이 보기에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김정은 정권의 지속성과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에서 나타난 변화를 해석하면서 기본적으로 정책의 사후적 성격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정책은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을 반영한 것이며 이념 및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히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권의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북한 문제의 쟁점과 과제, 북한 체제의 지속성과 변화를 보면, 김정일 시대나 김정은 시대가 처한 대내외적 도전과 과제는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김일성이 남긴 체제 유산의 상당부분이 와해되는 상황에서 기존 체제의 기본적 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 재건과 체제 보장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제는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요구되나, 개혁개방으로 인한 체제의 위기 증가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딜레마를 김정일 정권에게 안겨 주고 있었다. 현재의 김정은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20여 년 전과 현재의 모습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의 본질은 유지되고 있으나 구조 및 체제 운영 방식과 대외환경,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주된 행위자와 조직의 능력과 의지 등에 있어서는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 변화의 제한성은 구조적 측면에서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이와 관련해서 제한된 변화가 가져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변화가 가져오는 작은 파장이라도 그것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 나가는 것이, 북한 체제 변화를 전망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 두 권의 책은 잘 보여주고 있다.

Ⅲ. 북한에 대한 인식과 연구 방법

북한 체제를 분석·평가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전망하는 데에서,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대상으로서 북한은 매우 명확해 보이나,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의 이데올로기적 속성과 폐쇄성, 특수성 등은 북한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북한 연구를 지역 연구의 하나로 간주한다면, 다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타자성을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북한은 타자로 간주되기보다는 우리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하므로 이것이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논의가

바로 북한 불변론이나 붕괴론 등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전문가 30인과 현대북한연구회의 연구자들도 바로 이 부문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고 있다.

불확실한 북한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북한의 급변사태 및 붕괴 가능성도 상정하고, 그 유형과 함께 유형별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도 분명히 북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분단 이후 형성된 구조와 남북관계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쉽지 않다. 다만 연구자 입장에서 이러한 인식을 연구 과정에서 최대한 배제한 가운데 실증적이고 논리적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해석의 문제이고 동시에 이를 정책적 차원에서 활용하게 된다면 정치적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논쟁이 근거가 미약한 가운데 희망적 혹은 부정적 기대나 바람이 개입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북한이라는 연구 대상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함께 연구 방법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 일부 연구자들은 북한이 서구에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분과학문에서의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또한 비교 사회주의적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다른 사회주의와 달리 해명이 어려운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연구자들은 분과학문 체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대체로 실증주의적 연구경향)들을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북한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 담론 및 텍스트 분석, 현상학적 접근, 일상

사 연구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비교 사회주의적 접근을 통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북한이탈주민과의 면접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 등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결과들이 제출되고 있다. 연구 분야도 정치, 경제에서 벗어나 사회, 문화, 예술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범위 또한 거시적 수준에서 미시적 수준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⁵⁾

이러한 연구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이다. 이 책에 수록된 11편의 논문들은 북한 문헌에 대한 분석, 기존 분과학문의 이론 적용(송영훈, 서보혁의 경우 국제정치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강동완·박정란의 경우 중국에서 만난 북한 주민과의 인터뷰도 활용)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 체제를 분석·평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필자가 주목한 것은 바로 북한의 추모문학집 분석을 통해 북한 당국의 정치적 의도를 파악한 이지순의 논문과 음악정치라는 개념을 활용한 강동완·박정란의 논문이다.⁶⁾

우선 이지순은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이 발행한 추모시집을 분석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이념적, 정치적 의도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5)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들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 못함으로써 후속 연구들의 자극제로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최근 연구 성과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북한학계의 조직적인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평가 작업이 향후 연구의 질적 향상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북한학계가 활발한 논쟁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6) 『한반도 전문가 30인에게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에서도 한반도 및 북한 전문가들이 모두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논문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에서 활용되고 있는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추모시집은 우선 상실(김정일 사망)에 대한 비탄과 원망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비탄과 원망이 안내하는 곳은 절절한 슬픔의 이면에 놓인 불안과 공포라고 할 수 있다(193쪽).⁷⁾ 그 다음으로 김정일 사망 원인이 과로에 있고, 그러한 과로는 인민들 자신의 탓이라는 인과론적 입장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195쪽). 지도자 상실의 원인이 인민에게 있다는 자책감, 내지 죄의식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결핍으로 남아 있는 상실의 대상을 채워 못 다한 책무를 다하는 것, 이전에 못다 한 사랑과 헌신을 다 주는 과정에서 죄책감은 자기비난을 멈추고 다시 생활의 에너지가 된다(196쪽). 궁극적으로 김정은을 향한 충성 맹세는 김정일에 대한 죄책감을 더는 필연적인 요소가 된다(197쪽).

북한에서 애도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행위이면서, 공적 영역 속에 존재한다. 애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일탈이 될 수 있다. 애도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은 소속을 증명한다. 작가를 포함하여 노동자, 농민, 아동, 청소년까지 모두 참여한 추모 문학집은 애도가 집단적 행위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개인과 제도 사이에서 소속과 충성도를 증명하는 표지가 된다(182쪽). 추모문학은 죽음의 시간을 복원하고 현재화한다. 이는 사건을 마주했던 개인의 시간과 문화적 기억을 결합하여 하나의 역사적 기억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83쪽). 기록의 통제는 기억의 통제이며, 기억의 통제는 정치적 권력의 공고화를 위한 것이다. 정치적인 통제권의 교체 후에는 정당성을 구조화하면서 기록의 내용도 변화한다. 북한 문학은 문학 언어로 치환된 기록물 보관소라 할 수 있다(199쪽). 이를 바탕으로 이지순은 김일성 시대와 마찬가지로 인민은 구원의 대상이고, 통치자는 메시아라는 등식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

⁷⁾ 앞으로 서술 과정에서 본문 괄호 안의 쪽수 표시는 서보혁 외 역음,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의 페이지를 지칭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으며, 국가 발전이라는 근대화 담론이 여전히 압도적인 오늘날, 북한이 목표로 하는 내일은 반세기 전의 지도자 숭배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고 평가한다(200쪽).

한편, 강동완·박정란은 모란봉악단을 통한 북한 음악정치의 의미를 파악한다. 모란봉악단 여성 구성원들의 파격적인 의상, 그리고 배경 화면과 음악으로 미국의 미키마우스와 영화 록키의 주제가가 활용되고 있는 것 등의 조치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 영상물을 비롯한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의 대중적 문화 욕구에 일부분 부응해야 할 뿐 아니라, 문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212쪽). 억압과 통제 우선의 통치가 아니라 이미 북한 상류층을 비롯해 하층민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남한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외부 문화에 대한 동경을 북한식 문화로 해석하여 호감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집권 초기 젊은 지도자라는 점을 장점으로 부각하여 북한 주민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최상의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모란봉악단을 통한 음악정치라 할 수 있다(293쪽).

그런데 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젊은 세대들은 젊은 지도자의 등장에 따른 변화로 인식하고 있지만, 기성세대들은 “우리 생활방식하고 맞지 않다”고 반응한다(215~221쪽). 이를 바탕으로 강동완·박정란은 모란봉악단이라는 문화적 코드를 통해 의도된 메시지를 주입하고자 하는 정권의 정치적 의도와 이에 대해 반응하는 북한 인민들 사이의 간극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234쪽).

이 두 연구는 북한 연구에서 ‘정치’ 개념의 확장을 요구한다. 정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고 이론적 합의가 부재하지만, 통상 정치는 국가권력(공적 권력)의 획득, 유지를 둘러싼 경쟁 및 권력을 행사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정치를 통치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치도 정치의 한 부분이지만 통치가 정치의 전부는 아니다. ‘지배의 정치’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저항의 정치’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한편, 맑스주의적 시각에서는 정치를 국가권력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계급적 실천의 총체로 파악한다. 그런데 탈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한 개인의 삶에 있어 정치적이지 않은 사적인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푸코의 계보학적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무엇이 공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인가 하는 것 자체가 ‘권력의 효과’이고 역사적으로 변해왔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도 기존에 사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가정, 젠더, 동성애 등의 문제 자체가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시권력에 주목하는 차이의 정치, 기억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 일상성의 정치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의 본래 이념과 달리 ‘국가와 경제의 사회화’가 아닌 ‘경제와 사회의 국가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에 통합된 상태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자생적 시장화로 공적 영역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 균열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 재조정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⁸⁾ 따라서 ‘권력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 그 자체가 권력 관계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회적 실천은 정치적”이라는 확장된 정치 개념에 입각해 북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는 북한 연구의 질적 향상과 내용의 풍부화를 가져올 것이며, 북한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8) 이우영 외,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서울: 한울, 2008) 참조.

IV. 김정은 체제 연구의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두 권의 책은 김정은의 북한 체제 연구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의는 이 가운데 정치와 경제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북한 연구에서 과거와 현재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분석과 평가, 그리고 전망의 판단 기준이 요구된다. 정치 분야에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연구의 경우, 김정은의 리더십과 권력정치에 대한 분석이 필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령과 파워 엘리트 사이의 권력정치가 작동하고 있는 체제의 구조적 성격과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권의 안정성은 구조적 측면과 함께 주요 행위자 및 조직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의 개념을 확장하여 권력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수령과 주민 간의 사회적 관계, 수령과 엘리트 간의 관계, 엘리트와 주민 간의 관계와 관련해 북한 당국의 공식 주장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추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인해 파워 엘리트들의 우려와 불만이 증가함으로써 정권의 안정성이 일정 정도 훼손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수령과 파워 엘리트 간의 관계 속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수령에 대한 불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충성에 대한 대가가 확실하고, 수령과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다면, 수령과 파워 엘리트 간의 ‘충성과 시혜’의 교환관계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권력정치 측면에서 진행되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연구는 확장된 정치의 개념을 적용한 이지순, 강동완·박정란 식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 종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제 분야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연구는 대체로 계획과 시장의 구분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경제정책의 의도가 계획경제의 강화 혹은 시장경제 제도의 도입인가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경제구조는 이미 이러한 구분이 쉽지 않을 정도로 계획 영역과 시장 영역이 상호작용하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위기는 아래에서부터 '자생적 시장화'를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주민을 결속시키고 사회통합을 유지해 왔던 사회운영 원리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였다. 북한의 경제구조는 자생적 시장화로 공식적인 계획경제와 합법·불(비)법적인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이중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북한 경제에서 시장경제 영역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행군' 시기 시장경제적 활동이 경제위기의 강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적 활동에 대한 통제는 곧 인민들의 죽음을 의미했다. 결국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한 주민생활 보장이라는 물적 토대가 와해되었고, 그로 인한 사회적 균열을 억압적 국가 기구를 활용해 억제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부분적 묵인과 용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관료적 조정 방식 내에서 관료와 주민들은 행정·명령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관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분배의 특혜와 편의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복종을 받았다. 이러한 관계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배급제의 마비로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사적 경제활동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계속 유지되었다. 다시 말해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사적 경제활동의 대가로 관료들에게 뇌물과 대가를 지불하고 관료들은 이를 묵인해 주었다. 또한 관료들은 직접적으로 사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조건 속에서 이들과의 관계를 활용해 친인척의

사적 경제활동을 돕거나 자신의 부를 축적해 나가기도 했다.

다시 말해 관료적 조정 방식 내에서 ‘은폐’되어 있었던 생존 논리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들어가 시장교환 논리를 매개로 ‘현실적 생존 논리’로 적극화되어 갔다. 이에 따라 시장 의존적 삶과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재 북한 사회의 모습이다. 결국 관료적 조정 양식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장적 조정 양식과 결합하면서 ‘기생적 또는 약탈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⁹⁾ 이는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에 수록된 김화순의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의 일과 의식”(143~173쪽)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에서 신흥부자로 등장하고 있는 ‘돈주’와 지배 엘리트 간의 정치적 관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경제의 특성상 돈주는 지배 엘리트의 ‘정치적 비호’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돈주는 탈계획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체제에 대한 이탈과 저항이 어렵다. 즉 시장화를 주도하는 돈주는 개혁이나 전환을 희구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기보다는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안정희구세력이 될 가능성도 있다.¹⁰⁾

이와 함께 지적할 것은 북한의 경제를 국내 차원에서만 분석하는 방법 차제의 문제이다.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에서 김일한은 북한의 인플레이션을 분석하면서 북한 내부 요인과 함께 세계 경제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119~142쪽). 자립경제노선으로 인해 북한 경제가 고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북한 경제가 세계 경

9) 이에 대해서는 이무철, “북한의 경제조정 메커니즘의 변화 경향 분석,” 윤대규 역음,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서울: 한울, 2008), pp.84~120 참조.

10) 이에 대해서는 윤철기, “북한 체제 변화에서 시장의 위상과 역할: 시장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북한연구학회,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과 북한연구의 성찰』(북한연구학회 2011 하계 정기학술회의 자료집, 2011년 6월 17일) 참조.

제의 변화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시간 간격이 있는 간접적 방식이지만 분명히 북한 경제도 세계 경제의 변화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북한 경제 연구에서 세계 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의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북한에게도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발전 및 쿠바 사례 등이 교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변화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국과 유사한 다시 말해 '경로의존적 형태'를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주의의 종별 변이로서의 북한 변화가 사회주의 체제 전환과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 북한의 행보는 여타 사회주의가 걸어왔던 개혁개방 및 체제전환의 수순을 모색하다 이내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식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약 북한식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과 대응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대북한연구회의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나무를 모르고 숲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라는 숲을 보여주기 위해 정성들여 가꾼 나무로 표현했다(5쪽). 북한 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한계로 인한 정책적 딜레마로 북한이 추진하는 개혁정책의 제한적 성격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숲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나무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밝혀나갈 때 향후 북한이라는 숲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권의 책은 바로 이러한 작업과 함께 논쟁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무철(Lee, Moo-Chul)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분권화 과정과 구조적 한계』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으로 있다. 주요 논저로는 “북한 교육정책의 정치학: 생산조건의 재생산을 중심으로”(2015), “향후 10년 북한 인권문제의 전개”(2012),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발전전략: 비판적 평가”(2011),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2011) 등이 있다.